

| | |
|-----------|-------------------------|
| 의안번호 | 제693호 |
| 의결 연월일 | 2024년 9월 11일 (제420회) |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 악화에 대한 회복기 지원금 지급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 |
|-------|-------------|
| 제안자 | 정책복지위원장 |
| 제안연월일 | 2024년 9월 4일 |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 악화에 대한 회복기 지원금 지급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 |
|----------|-----|
| 의안 번호 | 693 |
|----------|-----|

제안연월일 : 2024년 9월 4일

제안자 : 정책복지위원장

1. 주 문

“붙임”과 같음

2. 제안이유

-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충청북도 내 청주·충주의료원을 포함한 전국의 공공의료기관들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국내 코로나 환자의 90%를 담당하며 헌신적 노력으로 국가적 재난을 막아냈지만, 코로나 종식 이후 제대로 된 보상은 받지 못한 채 심각한 경영 악화와 의료수입 감소로 재정적 위기에 처함.
- 청주·충주의료원의 경우에도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해 수입이 1/5수준으로 감소했고, 매년 100억 이상의 적자 누적으로 직원 임금체불까지 우려되고 있음.
 - 이는 의료원의 자구책이나 충청북도의 재정만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며 자칫 공공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음.
-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 전담병원들에게 약속했던 회복기 지원금을 일방적으로 책정된 최소 비용만 지급한 채 그 이후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음.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의료원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손실보상 기간 연장 및 회복기 지원금의 조속한 지급, 지방의료원 경영안정화 대책 마련, 지역 간 의료 서비스 편차 해소 및 필수 의료진 확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함.

□ **붙 임:** 건의안 1부

□ **보낼곳:**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대한민국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 악화에 대한 회복기 지원금 지급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코로나19가 급속한 확산과 높은 치명률로 전 국민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내 다수의 민간 병원들이 코로나 환자의 진료를 포기한 반면, 전국 의료기관 병상 수의 단 10.5%에 불과한 지역 공공 의료기관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90%를 담당하며 국가적 재난을 막아냈습니다.

충청북도 내 공공의료기관인 청주·충주의료원도 2020년 2월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어 2022년 6월 해제될 때까지 코로나19 환자의 진료에만 전념하기 위해 기존 입원 환자들의 타 병원 전원, 진료과 축소 및 병동 폐쇄 등을 감내하며 최일선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당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24시간 비상체제하에 코로나 환자 진료에 몰두했던 청주·충주의료원의 의료진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적 희생은 보상이 아니라 경영 악화, 진료 역량 붕괴,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적자로 지방의료원의 생존마저 위협받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전담병원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 환자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이라는 부담감으로 환자들이 내원을 꺼려 하게 되면서 입원 및 외래 환자 수가 급감했고, 의료 수입 또한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청주·충주의료원 모두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주·충주의료원은 매년 각각 1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직원들의 임금 체불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적자 규모는 의료원의 자구책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며, 충청북도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액수입니다.

이는 비단 청주·충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며, 코로나 시기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서 최일선에서 헌신했던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2년 9월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이후 지방의료원이 진료실적을 회복하기까지 약 4.3년(5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영적자 회복 기간을 감염병 전담병원 6개월, 거점병원 1년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만 지급한 채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시기에 공공의료기관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고, “덕분에”라며 추켜세웠던 정부가, 코로나가 종식되자마자 약속했던 보상은 조기 중단하고 자구책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현 상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의료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면서도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민간 병원과 비교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의료원은 인건비도 지급하기 어려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 서비스 편차를 줄이고, 민간이 기피하는 필수 진료와 의료 취약자를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과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약속한 코로나 회복기 지원금(손실보상금) 지급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164만 충청북도민의 절박함과 의지를 담아,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경영 악화 해결과 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경영 정상화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의 연장 및 회복기 지원금 지급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시 정부에서 약속한 회복기 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지방의료원의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이후 경영 정상화까지 손실보상이 필요한 회복기 기간의 합리적 재산정을 통해 연장하고, 이에 따른 회복기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해 주십시오.

2. 지방의료원을 위한 중·장기적 재정 지원 체계 및 경영안정화 대책 마련

국가 방역과 공공의료 시스템의 핵심인 지방의료원을 위한 중·장기적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지방의료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3. 지역 간 의료 서비스 편차 해소 및 필수 의료진 확보 대책 마련

의료 불균형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최소화하고 부족한 지방의료원의 필수 의료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2024년 9월 11일

충청북도의회